17대 마지막 국회 개회… 지역현안 점검

'혁신도시' 지키고 과기원법·F1법 꼭 통과를

18대는 여대야소 … 이번에 가결시켜야
쇠고기·한미 FTA 비준안 최대 쟁점

4월 임시국회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의 회기로 열린다.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한나라당에 비해 강세인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혁신도시, 쇠고기 시장 개방, 과기원법, F1법 등 지역 현안을 쟁점화하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동혁신도시**=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 변경 논란도 이번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당장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6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또한 건교위, 재경위,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도 혁신도시 건설 관련 부처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은 여·야 의원들에게 공동 현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밝혀질 공산이 크다.

◇**쇠고기 국회**=이번 임시국회는 '쇠고기 국회'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건넨 방미 '선물'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쇠고기 협상은 정치권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다.

여권은 17대 회기 내 한미 FTA 처리를 위해 쇠고기 협상을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지만 야권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 FTA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비준**=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도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구체적 피해 대책 마련 없이는 비준안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 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한나라당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비준안 통과에 부정적인 반면 민주당의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비준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각 당이 당론을 모으는 과정부터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현안 법안**=F1 특별법과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지역 법안이다.

18대 국회는 여대야소가 된다는 점에서 여소야대인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손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일단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임시국회 처리 법률안 명단에 빠져 있다.

문광위에 있는 F1 특별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경주 역사도시 특별법 등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또,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도 대전 과기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 대전 지역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국한우협회 주최로 2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 한우 농가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쇠고기 청문회' 가능 할까

여야 입장차 … 개최 불투명

민주 野 단독처리 정치적 부담
한나라 거부땐 사실상 불가능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이 합의 추진키로 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 3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달 6~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청문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다. 현재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원내 제 1당이고 여기에 선진당, 민노당 의원 수를 합치면 과반을 넘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구시대적이고 악의적인 정치선동"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서 청문회를 계속 거부하기에는 부담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청문회라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상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청문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청문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내에서 위원 선임, 실시 방법이나 장소, 대상 등 제반사항을 결정한 뒤 청문회를 실시토록 돼 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야 3당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위원 선임, 증인 신청, 청문회 실시에 이르기까지 야당 단독으로 할 경우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아직까지 여당이나 야당 단독으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청문회 효과도 미지수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며 "일단 이번 주까지 한나라당의 답변을 기다리되 거부하면 다음 주초 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모여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야권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미 예정돼 있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나 정부 업무보고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우병 쇠고기 수입 철회하라"

전국 한우협 대규모 규탄대회

전남 한우 농민을 비롯한 전국 한우 농민들은 24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국 각지에서 모인 7천여명(경찰 추산)의 축산농민들은 "4·18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은 미국 압력에 굴복한 굴욕협상"이라며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협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협상 이후 정부가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라며 내놓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등은 전시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기준가격 상향, 소득보전 직불제, 쇠고기 수입관세의 목적세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축산농민의 문제 이전에 국민건강의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쇠고기청문회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농민들은 '오늘은 한우가 죽은 날'이라며 상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전국 한우협회 지부장, 축협.농협 조합장들이 연단에 올라 농민들에게 사죄의 절을 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오후 3시 40분께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으며 농민 대표들은 항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이날 집회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거조와 취재지원팀을 포함, 경찰 4천여명이 배치됐으나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 '쇠고기 위생조건' 격론

한나라 "117개국중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은 日뿐"
민주당 "우리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잘못"

한나라당 이한구,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24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차례로 출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을 옹호한 뒤, "국민건강과 축산업 타격 대책이라는 두 고려점이 있는데, 축산업 발전대책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산 축산물 고급화 정책을 제시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선 광우병 관련 체크를 국제기준에 맞게 하느냐 등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만 먼저 위생조건을 철폐한 것이 잘못"이라며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대만 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한다. 우리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국 117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은 일본뿐"이라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치면 유럽만큼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은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최 의장은 "유럽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세부 수입조건을 보면 12개월 미만은 혀는 안 되고, 24개월은 골수는 안 되고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다"면서 "우리가 EU 국가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뼈 부분과 관련, 이 의장은 "국민이 미국산에 위험이 있어서 안 고아 먹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우인줄 알고 사는 게 문제"라며 "그것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의장은 "다른 나라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둘러 먼저 했다"면서 "우리는 서둘러 협상을 하다 보니 검역주권을 놓쳤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는 검역을 중단해야 하는데, 협상을 보면 중단할 방법이 없다. 수입위생조건을 관철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